■ G20이 그려낸 금융개혁 로드맵은

통화정책·재정지출 확대 내수 부양 추진

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20개국의 모임인 G-20은 15일 첫 정상회의를 열어 실물경제의 활성화 방안과 금융시장의 안정 및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주요 선진국들이 일제히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G-20 정상들은 긴밀한 거시경제정책의 공조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으며, 금융시장과 금융감독체제의 개혁에도 역점을 뒀다.

각국 금융당국간 협력 강화 금융위기 예방

◇**투명성·책임성의 강화**=미국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갔던데에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고 감독당국이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G-20 공동선언문은 지적했다. 따라서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해 국제회계표준기구들이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장부 외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공시 기준의 취약점을 개선토록 했다. 특히 모기지관련 파생금융상품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때까지 감독기관이 제어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앞으로는 금융기관들이 국제관행에 맞춰 리스크에 대한 공시와 손실을 공개하도록 했다.

◇**규제·감독체제의 개선**=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화포럼(FSF), 여타 규제감독기관들에 대해 자산평가와 레버리지, 은행자본 등이 경기변동에 따라 지나치게 반응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권고사항을 도출하도록 했다. 특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에 쏠림 현상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기준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들과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과도한 단기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제를 강화하도록 하고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내부인센티브제도를 마련토록 했다.

◇**국제협력의 강화**=각국 금융감독당국들은 주요 다국적 금융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감독당국들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협의 등 모든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현재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금융감독기구의 대표, IMF, 세계은행 등을 포괄하는 기구인 금융안정화포럼(FSF)의 회원국에 신흥경제국을 포함시키기로 해 한국도 FSF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됐다. IMF와 FSF에 대해서는 국제 금융시장의 조기경보기능을 구축토록 했다. /연합뉴스

G20 세계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후 (한국시각 16일 오전) 미국 워싱턴 시내 기자단 숙소인 팔로마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방문,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파격' G20 회의 결과 직접 브리핑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한국시각 16일) G20 금융정상회의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G20 정상회의 1~2차 전체회의와 정상업무 오찬을 끝낸 뒤 곧바로 현장에 차려진 프레스센터를 방문, 언론설명회를 갖고 약 30분 동안 이번 회의의 의미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대통령이 특정 회의결과를 직접 브리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 대통령이 이번 회의를 얼마나 비중있게 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대통령 직접 브리핑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의 건의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가 규모면에서 크기도 하지만 어느 나라 정상의 말 처럼 '이번 위기가 인류문명사에 있어 최대 위기이고 중대국면'인데다 앞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헤쳐 나가야 될 뿐 아니라 떠맡게 된 책임도 커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G20 금융정상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는 또 다른 보호무역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세계경제는 더욱 침체에서 헤어나기 힘들게 될 것"이라면서 "신흥경제국들이 보호무역주의에 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통합감독기구 설치 등 개편론 확산될 듯

■ G20 금융규제 감독강화 국내 대응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G20(서방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시장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푼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파생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규제,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 내년 2월 예정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 연기와 감독체계 개편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 **금융규제·감독 방향은**= G20이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부실의 끝을 알 수 없는 파생상품의 난립, 규제와 감독의 공백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초래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법은 금융권역의 장벽을 허물어 종합금융투자회사의 등장을 허용하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 등 대대적인 규제 개혁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감독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규제 완화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이를 연기하거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는 현재 자본시장통합법의 연기론을 일축하며 보완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헤지펀드는 예정대로 이르면 내년에 도입하되 헤지펀드의 파생상품 투자와 채무보증 등을 제한할 계획이다.

◇**감독체계 개편론 확산될 듯**=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감독 강화가 절실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국내에서도 감독체계 개편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G20 금융정상 회의에서 "한국이 97년 외환위기 때 은행과 증권, 보험을 포괄하는 '통합감독기구'를 설치한 바 있다"며 이를 금융감독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국제 사회에 제안했지만 우리나라의 감독체계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4일 '효율적 재정.금융정책 수립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불을 지폈다. 당시 공청회에서 윤석현 한림대 교수는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 내 금융국으로 재배치하고 이 경우 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별도 처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오늘 워싱턴發 라디오 연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오전 세번째 라디오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를 통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국민적 단합을 다시 한번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연설은 이 대통령이 G20 금융정상회의 참석차 방문중인 미국 워싱턴의 현지 숙소에서 녹음한 것으로, 국제 금융위기를 맞은 주요국 정상들의 분위기를 육성으로 전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지난달 13일과 지난 3일 두차례 라디오연설에서 금융위기 극복 방안 등을 밝힌 이 대통령은 이번 '워싱턴발(發) 연설'의 주제도 '경제'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우선 G20 금융정상회의 선도발언을 통해 내놓은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4대 구상, 7대 제안' 등을 소개한 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공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